

기 고

한-인도네시아 '특별 전략적 동반자'... 미래 협력의 축

이 재 현

수석연구위원

2026-03-31

4월 1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다. 작년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두 번째 방한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지난해 10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 된다. 이번 만남은 여러모로 미래 양국 관계와 상호 이익에 중요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7년 특별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2022년에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맺은 베트남과 더불어 동남아 국가 중 가장 긴밀한 관계다.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의, APEC, G20, 믹타(MIKTA,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중견국 협력에서도 함께 한다. 그 어떤 국가보다 외교적으로 한국과 접촉면이 많은 국가다.

2020년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원자재, 광물을 수입하고 한국은 인도네시아에 반도체, 기계 등 고부가가치 중간재와 완제품을 수출하는 상호보완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다. 경제협력 관계는 무역에서 그치지 않는다. 한국 대기업이 인도네시아의 니켈 등 풍부한 광물 자원

활용을 위해 현지에 직접 투자, 생산하는 단계로 협력은 진화하고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경제관계다.

혼란스러운 글로벌, 지역 경제질서 속에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경제 문제에 관한 협력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더 구체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에 비상이 걸린 지금 원유, 천연가스는 물론이고 석탄을 풍부하게 가진 인도네시아와 에너지 및 자원 협력은 더욱 긴밀해져야 마땅하다. 현재도 인도네시아는 호주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로 석탄을 많이 수입하는 국가다. 이런 협력은 에너지 자원을 넘어서 니켈 등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하고 한국에는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협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원전, 인공지능, 방산 협력도 양국 간 미래 협력 전망을 밝게 하는 분야다. 인도네시아는 산업화, 탄소 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 데이터센터 설립 등으로 크게 늘어날 에너지 수요에 대비해 소형 모듈러 원전에 관심이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향후 원전 협력과 관련한 상호 의사를 확인했고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한 상태다. 인공 지능 분야도 한국의 앞선 기술과 인도네시아의 큰 인구에서 나오는 데이터 사이 결합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다.

인도네시아는 2001년 KT-1 훈련기를 시작으로 상륙함, T-50 고등훈련기, 잠수함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했고 KF-21을 공동 개발 중이다. 여기서 축적된 노하우로 한국 방산은 지금 세계 시장을 누비고 있다. 아무리 좋은 함정과 항공기를 만들어도 수출한 기록 없이 국제시장에 진출하기는 어렵다. 인도네시아 수출이 우리 방산의 도약대가 된 셈이다. KF-21 협력 관련 논란도 지난 정상 간 만남에서 해소되었고 양 정상은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류도 중요하다. 동남아에서도 인도네시아의 한류는 특별하다. 케이(K)-팝을 예로 들어보자. 트위터(현 X) 공식 기록에 따르면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K-팝 트위터양 1위는 인도네시아가 차지했다. 한편 최근 이런 한류 인기에 부정적인 신호들

이 있다. 한류를 지속하고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이런 부정적인 기류를 관리하는 동시에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 문화 교류가 되도록 인도네시아와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환경은 매우 어지럽다. 미·중 강대국 경쟁과 강대국 일방주의가 개별 국가의 주권을 제약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일으킨 전쟁이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회복한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파도가 거칠수록 손잡고 연대할 친구가 필요하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상호보완적인 중견국 사이에 당면한 공통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열어 가는 전략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번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과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이런 연대를 만드는 중요한 이정표이자 도약대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 본 글은 3월 31일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기고한 글이며,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